

국회 '경제비전 21 연구회' 조찬 토론
------------------------

2001. 11. 10(화) 07:30
-----------------------

국회 본관 귀빈식당
------------

# 비전 2011

-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 -

(「비전 2011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요약)

2001. 11. 20

한국개발연구원

## < 요약 >

### <인사말씀>

- 여야를 초월한 「경제비전21 연구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비전 2011」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의의 깊게 생각함.
- 「비전 2011」 작업은 지난 7월부터 착수하여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며, KDI가 중심이 되었지만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요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30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성안하고 있음.
- 금번의 「비전 2011」은 과거의 장기비전 수립 작업과는 달리 10년 뒤의 희망적 미래상을 그려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구조개혁 과정을 냉정히 조명해 본 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대내외 환경변화와 극복해 나가야 할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여야간 진지한 정책대결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음.
- KDI는 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하에 「비전 2011」에 대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1.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개혁

### <구조개혁의 의미>

- 1960~80년대까지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화로 큰 성과를 이룩한 한국경제는 90년대에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노력과 시장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기업구조를 혁신하지 못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 체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
- 구조개혁의 목표는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개혁의 내부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사협력체제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동시에 추구되었음.

### <금융부문 구조개혁>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생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융감독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나
- 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부진한 문제를 낳게 되었음.
- 그 이유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의 한계,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 저항 극복의 한계 때문이었음.

### <기업부문 개혁>

-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제금융 사회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지배주주(오너) 중심의 경영관행이 잔존 하여 전문경영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임.

#### <정부혁신부문>

-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 개혁 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한국 관료사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혁되었다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 동안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시장기능 존중보다 관료적 개입에 우선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

#### <노동부문>

-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 노사정 합의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음.
- 그러나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그 이유는 경영자측의 경영투명성 부족, 정부의 편의주의적 개입 등으로 노사간의 신뢰기반이 강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복지부문>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미흡하여 장래에 많은 문제 내포
- 그 이유는 복지인프라의 부족,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

- 이상과 같이 전반적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경제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임.
- 경제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되는 것이므로 여야간의 협력이 절실함.

## 2. 지속적 성장동인의 확보

### <단기적 경기대응노력>

- 지구촌 차원의 경기불황(Global Recession)과 9.11 미국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 불가피
- 미·일 동시불황의 여파는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큰 파급을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음.
- 한국이 7월 이후  $\Delta 20\%$  수준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2%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로 볼 수 있음.
-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 <장기적 잠재성장과 성장동인의 확보>

- 우리의 잠재 성장율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향후 10년간은 5% 수준으로 추정됨.
- 과거의 주요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과 자본 투입의 중요성은 앞으로는 크게 감소하고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 동인이 될 것임.
- 향후의 생산성 향상은 시장경제기능의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 지식정보화 속도는 우리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

### 3. 향후 10년간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

#### <세계화의 심화>

- 「뉴 라운드」의 개시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 증대
-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더욱 가속화되어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추진되고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될 것임.

#### <디지털경제의 확산>

-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의 기술혁명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

#### <동북아경제의 성장>

- 중국경제가 년평균 7% 성장할 경우 2015년에는 미국경제 규모에 접근
- 그러나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 지속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금융시장기능의 한계, 국영기업의 구조적 문제,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투자, 관료의 부패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산적
- 우리는 경제시스템의 우월성, 인적자본의 우월성 등을 유지하여 중국 경제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함.
-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포함)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우리가 지역경제협력을 주도할 필요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도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기 위하여 한반도를 관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Benefit-Cost」를 계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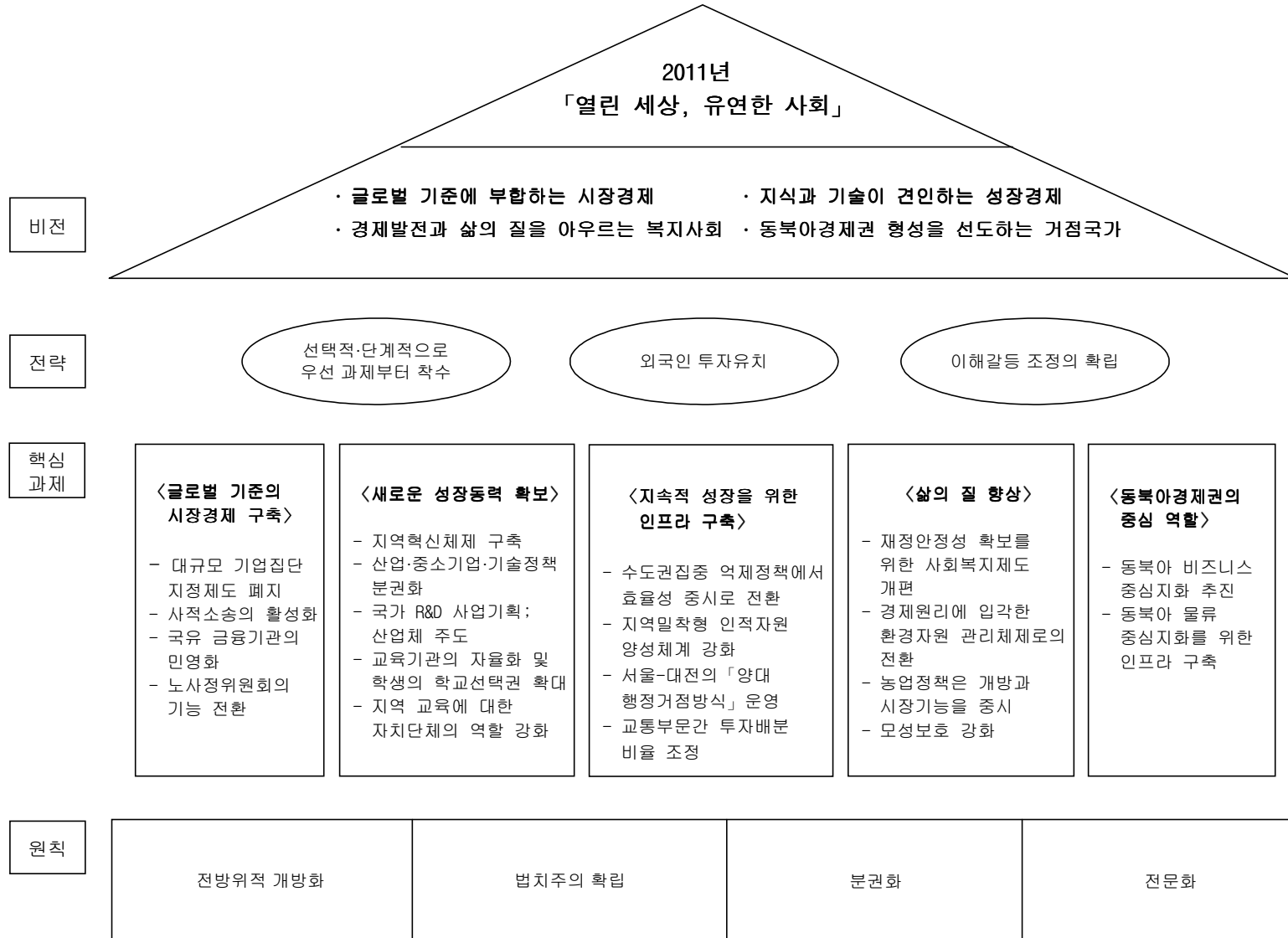
#### <고령화사회의 전개>

- 2000년 7.1%인 노령화비율이 2022년에 14%로 전망
- 고령화에 의한 노동공급의 축소, 복지지출의 증가 등 영향이 심대

####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국가나 노조 등 공동체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시장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 스트레스의 증가 등 부작용도 심화

##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



## 5.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규제방식을 글로벌경제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경쟁정책을 강화
- 私的 訴訟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
-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및 부분 민유화 병행 전략' 추진
  - 실질적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상승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의지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
- 금융기관은 성과중심 경영체제 정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성과보상체계의 확충을 통해 혁신지향적 임직원을 확보하고 위험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
-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여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
-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 중기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의 투자우위 순위의 일관성 확보
- 독립적 규제기구 또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확립을 전제로 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요금규제방식 등 각종 정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

##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 지역발전이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체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운영방식을 개편
- 산업·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을 분권화
  -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차등화
- 국가R&D사업, 산학연 협동사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역할 대폭 강화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방 수준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확대
- IT의 수요·활용기반 강화로 IT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상의 개인보호, 보안 등에 관한 규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IT활용에 대한 기업·소비자의 신뢰 확보
  -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을 조기에 정착
-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
  - 교육의 평준화 개념은 초등학교와 중학의무교육 과정으로 국한하고 고교부터는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 부여
  - 교육훈련기관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금지 위주의 현행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 IT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교육의 정착 지원
  - 사이버 교육의 운영모델 및 콘텐츠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

##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별개의 관점에서 시행
  -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win-win전략을 채택
- 지역에 밀착된 인적자원의 양성체계를 구축
  - 현재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지역발전중심센터로 특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국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 운영
  - 청단위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대전지역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추가이전을 검토하여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으로 운영
- 교통부문간 투자배분 비율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제시
  - 중장기적으로 도로투자는 현재의 총교통투자 대비 60% 수준에서 5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철도와 항만투자는 각각 현재보다 2%~3% 포인트 이상 상향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
-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
  - 현재의 초과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통행요금, 시설이용요금 등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

-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와 가격체계 정비
  - 非중동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
  -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전력가격체계 정비

### <경제발전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편
  -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급 대상폭을 확대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자원 관리체제로의 전환
  - 환경자원 사용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자발적인 자원사용 절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
  - 환경통계 확충, 원격측정장치 구축 등 환경분야 정보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오염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상근거를 정비하는 등 환경정책 선진화에 주력
-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정책전환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확대로 보완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지원, 탄력적 근무제 확산 등 수요와 공급측면의 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 추진
  - 또한 적극적 개방추진으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구축 필요
    - ※ 한반도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 수행
    - ※ 이를 위한 동북아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상호이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투자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휴양단지로 집중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산업, 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국제거점으로 발전

# 목 차

<b>I.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두</b> .....	1
1. 개발연대 경제의 기본틀 .....	1
2. 90년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구조전환을 위한 시도 .....	2
3. 비전 수립을 통한 범사회적 대응노력의 결집 .....	4
<b>II. 오늘의 한국경제</b> .....	5
1. 경제시스템 전환의 문제 .....	5
2. 사회적 합의과정의 문제 .....	11
3. 성장동인 변화에 대한 대응력 문제 .....	13
<b>III. 주요 경제여건의 변화와 시사점</b> .....	16
1. 세계화의 심화 .....	16
2. 디지털경제의 확산 .....	17
3. 동북아 경제의 성장 .....	17
4. 고령화 사회의 전개 .....	18
5.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	19
<b>IV. 한국경제의 비전과 제도약을 위한 전략</b> .....	20
1. 2011년의 한국경제 비전 .....	20
2. 추진원칙 .....	21
3. 추진전략 .....	27
<b>V.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b> .....	34

# I.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두

## 1. 개발연대 경제의 기본틀

- 강력한 자원동원방식에 의해 수출주도에 의한 산업화 추진
  - 이 시기에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의한 생산성의 제고보다는 산업화의 성공을 위하여 계획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중시
  - 수출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확보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필요한 부품 및 자본재 수입을 위한 지불수단으로서 더 중요
- 효과적인 자원동원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중앙집중적 자원배분방식이 활용되었고 주변부문으로의 자원 분산을 통제
  - 그 결과 제조업 우선,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형성
  - 정부의 금융개입에 의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공급을 통제. 또한 산업화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투자위험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증
- 중상주의적 무역이념에 입각하여 수출은 적극 장려되었으나 수입 및 외국인에 의한 투자는 억제하는 선택적 개방을 지향
  - 수출기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시장의 독과점화를 상당부분 허용
-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경제개발 지원에 국가 자원의 배분이 우선되었고 사회복지대책은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수준에서 억제

- 공동체주의,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여 노인 등 경제적 취약자는 가족단위에서 부양되었고 기업도 가부장적 조직문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상당 수준의 복지를 부담
-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의한 통제력과 지속된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유지
  -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신규 성장업종에서 인력의 흡수가 높아 구조 조정이 갈등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신속히 추진

## 2. 90년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구조전환을 위한 시도

### 가. 대내외 환경의 변화

- 선진국의 금융자본 및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방화를 통한 세계 경제로의 편입이 경제발전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
  - 특히, 외국인 투자를 매개로 하는 선진국의 지식 및 기술의 유입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제고됨으로서 정부의 자원동원방식에 의한 경제성장의 추구보다 시장기능에 점차 역점이 주어짐
  - 저임금 노동력의 고갈에 따른 고임금화는 물론 자본 생산성 또한 하락하는 등 자원투입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저하
  -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이 도입할 신규 생산품목이 줄어드는 가운데 저부가가치 영역에서는 개도국의 시장잠식으로 경쟁우위가 축소

-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 개도국들의 산업화는 한국의 전통적 수출시장을 잠식하지만 다른 한편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요 증대를 유발
  - 개도국의 추격은 저부가가치 영역의 전통산업을 잠식하는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저가품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을 제고시키고 이들 국가에 필요한 고부가 품목 수출 확대등 기회요인을 제공
  -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하는 점
- 시장개방 등으로 경제구조가 급변하고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구조조정 압력을 흡수하는 여력이 축소되면서 이해집단간 갈등이 표면화
  - 정치적 민주화로 각 이해집단의 욕구가 자유롭게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해 상충집단간의 양보와 타협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함.

#### 나. 정책적 논의에 그친 전환 노력

- 이처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 분야별로 대응방향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실제 정책으로의 추진은 지체
  -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적 대응들은 모두 기존에 형성된 이해관계를 변경하는 것들이므로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추진상의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움.
  - 1990년대에 들어 금융구조개혁이나 재벌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무수히 논의되었으나 실제 행동은 지체된 결과,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체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

### 3. 비전 수립을 통한 범사회적 대응노력의 결집

- 경제위기를 계기로 착수된 개혁조치들은 국가적 위기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주체가 되어 제도적 장치들을 우선 도입한 것이며 실제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정착되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새로이 도입된 제도적 조치들이 실제 규범으로서 작동되려면 실제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
  - 더욱이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고통분담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개혁에 대한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
- 경제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기존의 이해관계 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점과 여건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간 인식의 공유가 필요
  -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바라는 10년 후의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그러한 미래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고 장애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 II. 오늘의 한국경제

### 1. 경제시스템 전환의 문제

#### 가. 기업부문

##### 1)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경제개혁

- 기업부문의 경제개혁은 경영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의 도입 및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이 이에 해당
  -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다수의 법·제도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만큼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 도산법제 및 운용의 개선,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의 구축노력, 외국인투자 자유화, M&A 관련제도 개선 등이 이에 해당

##### 2) 기업부문의 개혁추진의 장애요인

- 경제시스템 전환이 본질적으로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 우리가 추구하려는 경제시스템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이 기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과거 수십년간 지배주주(오너)의 경영권 독점에 따른 전문경영인의 부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투명성 등 역사적 유산을 안고 있어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도입된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 실효성있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 예로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연의 기능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주주권이 법적으로는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권리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미래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율을 시장 자체의 상시적인 규율 또는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을 수용해야 함
  - 재벌규제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규제 또는 시장자체의 규율로 대체되어야 함

## 나. 금융부문

### 1)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경제개혁

- 정부가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상당수의 부실 금융기관들을 합병, 자산부채 이전, 청산 등을 통해 정리하고,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와 누적된 부실채권의 정리를 지원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하였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금융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추진
- 한편,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지원 등으로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잉여인력·부실점포의 감축 등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자구노력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경영혁신도 확산되고 있음

## 2) 금융부문 개혁추진의 장애요인

- 금융부문의 경우에도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한 대내외 신뢰의 확보가 시급하였으나, 부실채권시장의 부재 등 하부구조의 미성숙은 개혁초기부터 개혁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부실채권시장의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본격적인 부실정리가 지연되었는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도 부실정리의 경험부족에 따라 거래기업의 채무재조정 등과 관련한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실정리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추궁만 강조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의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유인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도 개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개혁 촉진을 위한 전문경영인의 확보 및 성과위주의 경영체제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 인력감축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이 부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다. 노동부문

### 1) 외환위기 이후 노동부문의 경제개혁

- 1998년에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의 도입을 계기로 법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착수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유연성은 정리해고가 허용되었음에도 제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는 정리해고의 전제조건과 정리해고 절차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임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는 법제를 통한 유연화보다는 비정규직 활용을 통하여 일부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치주의와 노사자치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음
  -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기대를 걸었으나 민주노총의 탈퇴, 합의대상의 광범한 설정, 합의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갈등구조조정에 한계

## 2) 노동부문의 개혁추진 문제

-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대립적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노력은 노사관계 각 주체간(노·사·정)의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정부의 노동행정이 상황논리에 따라 분쟁진화 목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법치주의적 노사관행의 정립이 지연
- 외환위기직후 사회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위기극복에 일조를 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각 주체의 대표성, 전문성의 문제, 합의도출 구도의 한계 등으로 최근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노사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역할이 공익위원에게 없으며 합의가 필요한 운영상의 문제가 걸림돌

## 라. 복지부문

### 1) 외환위기 이후 복지부문의 개혁추진

- 사회보장제도의 골격 완성: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4대 사회보험과 빈곤선 이하의 모든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한 연대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의료보험통합이 추진되었고, 국민건강 증진 및 진료비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이 추진되었음
-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

## 2) 복지부문의 개혁추진 장애요인

□ 현재의 구도를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사회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이미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2000년 현재 각각 연간 2조원, 6천억원 내외의 당기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
- 국민연금도 현재와 같은 부담과 급여가 유지된다면, 2034년부터 적자로 반전되고 기금의 급속한 고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은 2001년 6월말 적립금이 고갈된 이후 10월 중순 현재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이 7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료율과 국고 지원비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적자폭은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

□ 미흡한 복지인프라와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등 준비 부족과 근로유인을 감퇴시키는 복지제도, 그리고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관계집단들의 반발이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를 수급조건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빈곤선과 신고소득간의 격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근로유인을 저하시키는 문제 발생

## 마. 정부혁신부문

### 1) 외환위기 이후 재정 및 공기업부문의 개혁추진

- 중장기적 재정개혁의 목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성과관리의 강화, 재정정보의 체계적 제공으로 요약됨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추진하여 2000년에 재정흑자를 실현
  - 재정3법(재정건전화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의 제·개정이 합의될 경우 재정개혁은 큰 진전을 맞이할 전망
- 1998년 선정된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 6개 기업의 민영화가 사실상 완료되고 5개 기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영효율을 저해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 및 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를 2001년 1월부로 도입하고,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채신 목표를 명시하여 이행실적을 평가

### 2) 재정 및 공기업부문 개혁추진의 문제점

- 각종 공적연금의 구조적 수지불균등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의 문제가 있고 각 분야 이익집단들의 요구로 인해 예산배분이 왜곡
  - 또한 성과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성과자료 축적이 미비되어 있으며 예산외 계정인 기금의 운영투명성 부족과 지방재정 운영상태의 체계적 파악 미흡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
-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요소가 잔존

-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에 직면해야 할 요금인상, 규제감독,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 개발이 필요
- 향후 요금규제 방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先매각, 後구조조정’ 이라서 인수가 기피되거나 인수에 참여한 기업들은 보상조건을 놓고 정부와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실정

## 2. 사회적 합의과정의 문제

### 가. 전환기적 가치관의 혼재

-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전통적 가치관과 산업화에 따라 도입된 가치관의 갈등이 남아있는 가운데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잉태되는 새로운 가치관과의 갈등이 부가되는 형편
  -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주의의 확대, 합리주의의 성숙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가족주의, 학벌주의, 지역주의 및 연고주의가 여전한 상태
  - 특히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외국인 투자가 국부유출이며 외국상품의 소비는 사치라는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의식구조가 잔존하여 있음

### 나. 이해갈등 조정장치의 작동 부진

- 현재 한국의 이해갈등 조정시스템은 「비전 2011」에서 제시한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해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역부족

- 한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갈등조정 위기는 국회, 정당, 그리고 각 행정부처간, 행정부와 이익집단간 정책조정기능 등 기존 제도적 장치의 기능이 미흡한 데에 기인
- 국회를 통한 이해갈등 조정과정의 작동이 부진
  - 지역주의, 연고주의에 치중되어 정당간 정책경쟁이 미흡
  - 여야 대결구도인 정당기능이 국회기능에 우선하는 문제점.
  - 행정부도 국무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 ‘회의체’ 기구와 청와대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종합적 조정기구간의 역할분담이 미흡
  - 정부가 이익집단 분쟁에 원칙없이 개입하고 개입 후 법치와 분규비용의 당사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중재하는 관행도 이익집단들의 자율적 분쟁해결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또한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권위와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이익집단 분쟁 관리가 과행적이며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의 압박이 큰 데 기인

### 3. 성장동인 변화에 대한 대응력 문제

#### 가. 전통적인 성장동인의 쇠퇴

-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과거에는 요소투입의 증대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성장이 견인되었으나 향후 성장유지의 관건은 기술개발의 질적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될 것임

### 잠재성장율 및 성장요인 전망 (2000-2020)

	1971~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2010		2011~2020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실질성장율	7.4	8.6	6.1				
불규칙요인	-0.8	0.6	-0.6				
잠재성장율	8.2	8.0	6.7	5.1	4.4	4.1	3.3
요소투입	5.2	4.5	3.4	2.4	2.2	1.9	1.7
노동투입	3.1	2.6	1.5	0.3	0.3	0.2	0.2
자본투입	2.1	2.0	1.9	2.1	1.9	1.7	1.5
생산성증가	3.0	3.5	3.4	2.7	2.2	2.2	1.6
규모의 경제	1.5	1.7	1.5	0.9	0.7	0.7	0.5
자원재배분	0.9	0.8	0.7	0.6	0.5	0.4	0.3
기술진보	0.6	1.1	1.2	1.2	1.0	1.1	0.8

#### 나. 경쟁우위의 변화와 지식정보화

- 지식집약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아직 저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어야 함
  -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수: 한국 55개, 독일 669개, 미국 618개 등
- 경쟁우위 품목의 확장과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를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나 이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지역기반의 집적화와 R&D 산학협동이 취약
  -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실제 집중할 분야의 선택이 시장에 노출된 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공급자인 대학과 연구소의 주도로 기획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해외지식의 유입이 필요하나 정책수단은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 주변 개도국과 경쟁이 불가능한 비용경감에 치중하고 있음

-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非IT산업에서의 IT투자로 인한 자본심화 효과, IT기술의 파급효과 등은 매우 미약
  -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영체제 등이 촉진되려면 사회적 신뢰 및 정보의 투명성이 필요함에도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확산에 한계

#### 다. 수요변화와 유리된 인적자원 양성체제

- 교육기관들이 외부 환경변화에 둔감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원화·고급화되고 있는 현장의 인력수요와의 괴리가 지속·심화
  - 대졸인력 전체는 초과공급 상태에 있지만, 대학의 특성화·전문화가 미진하여 유망 신기술분야 등 주요 부문의 전문 인력은 부족
  -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권 및 학교선택권이 심각히 제약되어 양질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 대학과 연구소에 상당수의 연구인력이 집적되어 있으나 기관간의 인력 교류나 연구협력이 미흡하여 생산성이 저조
  - 해외의 우수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도 폐쇄적인 인력수급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 라. 고비용 저효율의 인프라 시설 및 운영

- 우리나라 교통시설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시설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상황은 벗어났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
  - 교통투자 및 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함으로써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2.1%에서 1997년 4.1%, 1999년 3.5%로 증가

- 또한 교통시설에 대한 통행요금, 시설이용요금 등이 낮아 교통의 외부비용이 시장으로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관리정책의 핵심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경우 우선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가 부족함.
  - 그 동안 국토관리체계가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나 하드웨어 인프라건설 위주 정책에 치우침으로써 실제적인 지역경쟁력 향상 기여에 실패
- 그동안 에너지공급기반 확충에 정책집중을 한 반면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에너지 소비감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담보상태
  - 특히 1990년대 들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7.5% 증가하여 경제성장률 6.1%를 훨씬 상회하여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화 추세에 역행
  - 중후장대형 산업구조가 에너지 효율성 저조의 원인이기 때문에 단기기간에 산업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의 구조변화에 의한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

### Ⅲ. 주요 경제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 1. 세계화의 심화

- 교역환경의 변화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기업내 세계분업이 촉진
  - 역내분업이 심화되면서 지역내 무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간 무역의 비중이 감소. 특히 지역간 무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이 점하는 비중이 증가
  -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무역비중이 감소하고 중간재의 무역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재의 기업내 무역이 확대되어 주요국의 총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
- 금융의 국제화는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의 겸업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수요의 다양화를 통해 금융의 증권화를 가속화
  - 겸업화의 확산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금융기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에 따른 국제적 경쟁심화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기관의 거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
  - 금융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통합된 금융시장 내에서 금융거래규칙의 보편화가 진전. 금융의 경쟁심화는 금융수요자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경제전반의 위험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및 전염위험에 대한 우려를 확대

## 2. 디지털경제의 확산

- 영토확장과 천연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경제 및 정치적 패권을 다투던 하드파워시대로부터 경제, 문화, 기술, 정보라는 지적활동을 결집하여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파워시대로 전개
  - 미래의 경영조직도 정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초탄력적인 조직이 다수 등장하고 외주용역, 재택근무, 임시직 근로자들이 확산될 전망
  - 산업경제로부터 정보경제로 전환되어 인터넷영상을 통한 제품선택이 일반화되고, 소비자의 기호가 중요시됨에 따라 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계획생산 위주로부터 주문위주로 변화
  - 온라인공동체를 통해 학연, 지연, 인맥 등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되어 새로운 온라인 연고와 배타적 의식이 생길 수도 있음
- 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에 근거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이 요구될 것임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전자공청회, 사이버국회가 가능한 인터넷민주주의, 즉 전자정치가 가능할 전망
-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에서 기술혁명이 이루어져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 3. 동북아 경제의 성장

- 1970년대 말부터 연평균 GDP 증가율 9.6%의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

은 향후 15년간 중국이 7%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경우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의 GDP가 미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CIA의 보고)

- 그러나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지속 하는데는 노동 및 금융시장의 유연성부족, 국영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 화교자본중심의 외국인 투자, 관료의 부패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동북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서 향후 유럽 및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로 부상할 전망

- 1999년 현재 세계경제의 약 1/5을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부상에 힘입어 2010년경에는 약 1/3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동북아지역은 그동안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에 소극적이었으나 직접 투자 및 교역의 확대로 상호의존이 심화될 전망

□ 동북아경제권 형성에서 점차게 될 북한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응하여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발전할 가능성

- 북한과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 완화될 경우 한국의 대외신용도 평가에서 국가리스크가 개선되는 효과가 중요

- 한반도를 관통하는 교통, 통신 등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한국이 동북아물류 중심기능을 확보하는데 유리.

#### 4. 고령화 사회의 전개

□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

- 1970년 3.1%에 불과하던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 7.1%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4%로 증가할 전망

- 한국의 고령화는 약 20년에 걸쳐 진행되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의 71년 등에 비하여 급속히 진전
-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공급의 축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그리고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 5.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기존의 공동체주의, 가족주의를 변화시키며 고용관계에서도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생산과정, 단체교섭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개인주의는 공동체 사회의 쇠퇴와 시장경제의 심화로 이어져 국가, 사회, 공동체의 권위를 약화시키면서 시장 경쟁적인 성향을 강화
  - 현재 한국의 고용관계는 조직지향적 요소와 시장친화적 요소의 혼합 체계 형태를 띠고 있지만 향후 시장적 합리성이 강화된 영미식 고용관계가 지배적 형태로 정착될 전망
  - 개인주의는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고 개인간 능력의 편차를 극대화하므로 계층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전망
-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비공식 지원체계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핵가족화를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형태(노인가구, 독신가구 등)가 출현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 욕구가 파생
  - 비공식 지원체계의 기능약화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서비스 정책(예 컨대, 탁아나 장기요양 등) 및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IV. 한국경제의 비전과 제도약을 위한 전략

### 1. 2011년의 한국경제 비전

####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 경제발전에 걸맞게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
-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 도래로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제도, 관행, 의식구조 또한 명실상부하게 상호일치하는 유연하고 열린 경제
- 기업, 금융, 노동, 정부 등 각 부문별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글로벌 기준의 시장경제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경제

####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바탕으로 수요와 밀착된 지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에서 성장동력이 확보된 경제

- 경제발전에 걸맞게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
  - 범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
  - 문화, 환경, 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이 경제발전과 조화되는 사회
  - 경제구조의 개편으로 파급되는 이해관계 변화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메카니즘이 확립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정착된 사회
-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 중국, 일본 등 동북아경제권의 이해 당사국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그들의 협력을 유도하며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
  - 동북아 연계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동북아경제권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 2. 추진원칙

### 가. 전방위적 개방화의 추진

- 개방화는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유연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절대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지식격차 및 제도격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임
  -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진전되어 온 개방화 기조를 법·제도는 물론 문화·의식·사회적 관행까지를 포함하는 사회전반에 확산시킬 필요
- 세계경제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원활히 확장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배타적 폐쇄주의의 잔존으로 세계경제와 단절될 경우 성장의 원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 선진국과 지식격차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경제와 심층적인 연계화를 강화함으로써 자본·기술과 함께, 해외지식 유입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 무역·금융분야의 실질적 개방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와 함께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 각 부문에 걸친 다각적 노력이 필요
    -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잔존 규제와 제도를 조속히 해소하고 개방화의 정책영역을 인력 및 문화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으로 확대
  - 세계경제와의 편입을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인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동적 수용이 아닌 능동적 유치와 토착화를 지향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교육, 정부조달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
- 혁신지향적 시장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경쟁 확대가 필요하며 해외 자본·지식·기술의 도입확대는 제도적 개방을 넘어서 사회적 관행과 문화적 측면에서 열린 사고를 갖출 때 가능
-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기존의 이해관계, 낙후된 법제 및 관행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가장 유효한 수단
  - 필요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항의 정리가 필요하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외래문화의 수용 및 다문화간의 교류·융합이 필요
- 개방의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집단에 대한 피해 등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해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강구

- 개방은 중장기에 걸쳐 경제집단 전체에 대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그 피해는 특정집단에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저항에 봉착될 수 있음
- 피해집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제를 마련하면서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새로운 갈등관리 모형을 정착

## 나. 법치주의의 확립

-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존 규범이나 관행이 해체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에 적합한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됨
  - 법치주의의 실현은 구조변화기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혼란을 줄일 뿐 아니라,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개혁 정책들이 정권 주기를 넘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동
-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음
  - 대부분의 법안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
  - 이로 인하여 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대신 이해관계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단점도 초래

- 행정부내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정책조정기구가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곤란. 또한 공식적인 기구와는 별도로 소수 정책결정자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
- 시민단체, 노조, 이익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형식적이고 임의적인 경우가 많고 달래기 차원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어서 이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책임의 부과가 불가능
- 불법과 합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합의기반이 확고치 않아 여론에 의해 합법과 불법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이 빈번하며, 그 결과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
  -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한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인식이 팽배
  - ※ “법 위에 국민정서가 있고, 국민정서 위에 떼쓰기가 있다”는 향간의 자조적 풍자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비상식이 상식화 되어 있음

□ 법규범과 법집행체제의 낙후로 인한 ‘법치주의의 실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제를 추진

- 행정력 중심의 경제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법과 제도에 기초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
- 사법관련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법집행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집행 현실을 고려한 법률과 규제의 제정: 법집행의 효율성에 개혁의 우선순위 부여,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등
- 법치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통한 법조계 일반에 경쟁압력 확대, 민사상의 책임원리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 글로벌 기준의 도입: 우리 현실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국제적 강제력이 있는 글로벌 기준을 최대한 도입하여 법집행에 대한 외적 견제력 확충

#### 다. 분권화

-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권한의 분권화가 가속될 필요
  - 다양하고 유동적인 현장의 수요를 중앙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그 동안 고도성장기의 원동력이었던 중앙집중적 방식에서 분권화 및 전문화 체계로 전환이 필요
  - 기업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분권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비시장적 경제·사회부문에는 아직도 획일화된 중앙집중적 체계가 잔존
- 우선적 분권화 조치는 정부의 민간 시장기구에 대한 개입축소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의 재정립이 필요
  -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경제활동 간섭배제는 우리 사회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남은 과제는 효과적 정책의 추진으로 집약
- 민간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는 규제완화의 차원을 넘어서 '네가티브 시스템'의 원칙을 표방함으로써 포괄적이고 근본적 자율화 조치를 시행할 필요
  - 기존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포괄적 금지-선별적 허용'으로부터 '포괄적 승인-선별적 금지'로 전환하고 정책 마인드도 전환

-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를 관련법에 지정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부수업무의 대상을 핵심업무와 겸업가능한 업무로 최대한 확대 허용
- 또한 교육의 경우, 현재 초중등은 물론 대학에서까지 개별 학교의 운영 전반을 세부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령 체제를 교육 3법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negative system 원칙을 반영하여 개정

-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기획·집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 중 지방 혹은 현장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 동기유발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과감한 분권화 조치를 실시할 필요
  - 중앙정부의 사업단위 기획 및 집행 기능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관련 기능이 지역을 단위로 통합되도록 현행 행정체계를 정비
  -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과 지역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
  - 또한 중앙정부내에서도 권한이임이 가능한 분야는 분권화를 실시하여 과다하게 집중된 현재의 운영체계를 개선

## 라. 전문화

- 정책결정의 분권적 체제 이행은 지역내 또는 부처내 실무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
  - 그 동안 중앙집중화의 주된 요인은 지역 및 부처 실무진 등 하부인적구성이 취약한 점에 기인.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

- 복지행정의 문제점도 기초조사의 축적 부진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하므로 결국 전문성의 취약으로 귀결
-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전문성 축적은 어렵지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정부 고급공무원 채용방식(속칭, 고등고시)을 개편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담당부서가 수요에 따라 상시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로 전환
- 또한 현재와 같은 단기간 근무에 그치는 순환형 보직은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므로 관련 직무의 범위내에서 인사를 순환
- 지역에서도 개방형 전문인력 충원방식을 도입. 그러나 지역의 경우에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더욱 시급하므로 정책개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유능한 인력 유치를 체계화할 필요

### 3. 추진전략

#### 가.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핵심과제를 추진

##### 1) 개혁 모멘텀의 확보를 위한 우선적 과제의 착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적 과제를 선택적으로 골라 개혁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모멘텀을 새롭게 창조하는 전략이 필요

- 제시된 비전들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핵심 전략 과제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 핵심 전략과제 추진에 의하여 개혁이 점화되고 난 이후에도 개혁이 제도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갈등의 조정기능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

## 2) 전략적으로 우선 착수되어야 할 과제들

- 당분간 기업, 금융, 노동, 교육, 동북아경제 등 각 부문에서 부문간 파급효과가 크고 개혁 추진기간도 비교적 단기에 그칠 수 있는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출하여 정책적 노력을 집중
  - 기업구조 개혁 및 외국인 투자자 신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자원배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안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 부실기업의 정리나 외국인 투자 등에 선행조건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
    -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들이 상당히 마련될 필요
  -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해외기업 유치로 통한 지역기반의 산업집적화가 시급하므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집중
    -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준의 규제와 국내규제를 비교하여 국내 규제가 더 강할 경우 이를 면제하여 주는 경제특구를 지정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는 물론 외국인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문화 및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
  -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에 적합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수요와 유리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개혁

- 교과과정, 재정회계 등에 관한 개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 여러 부처에 산재된 대학관련 지원제도를 전면 정비하여 대학 스스로의 차별화·다양화 노력을 유도하고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
- 우리 경제의 성장 지렛대 역할이 기대되는 동북아경제권 국가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추진
  - 세계적 공용어인 영어는 물론 주변국 언어(일어, 중국어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인을 교사로 채용하여 중등교육 이수후에는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효성을 제고
  -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대국으로 둘러싸인 네덜란드는 이들 국가간 무역중개 역할이 경제의 동력원임을 인지하여 초등교육에서부터 2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 교육을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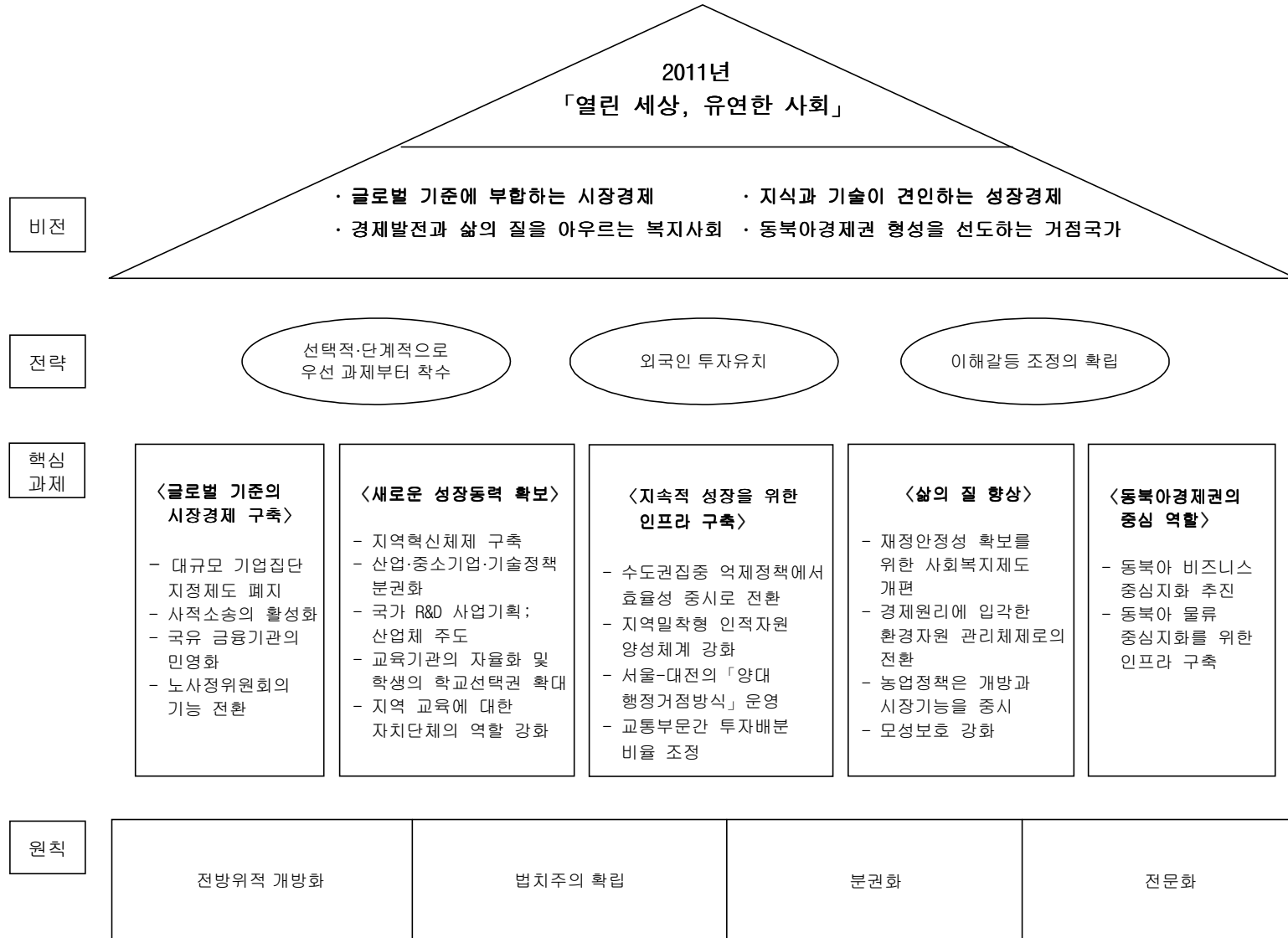
## 나. 이해갈등 조정 기능의 확립

- 개혁이 모멘텀을 얻어도 경제구조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이해갈등을 해소하는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혁이 지속되기는 어려움
  - 우선과제의 도출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지속적인 개혁으로 실천하려면 이해집단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사회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따라서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

- 한편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자율원칙에 의해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 경쟁규칙의 확립 및 정당성의 확보가 시급하고
  - 정부의 역할이 갈등의 당사자로부터 갈등해결의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심판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 이익집단의 정치참여를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
- 갈등 조정·중재 제도의 경쟁규칙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칙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방법이 필요
  -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결원칙의 정착과 국회정당의 정책전문성 개선을 통한 국회 갈등조정기능의 정상화 도모
  - 부처간 정책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집중적 정책조정체제의 분권화 기초를 유지
  - 각 부처는 의회와의 협의부서를 신설하여 입법준비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비능율을 제거
-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여 이익집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익집단과 정부 또는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체제의 수립 방안을 강구
  - 이익단체가 정부와 직접협상을 통해 법규 개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합주의적 정책조정기구인 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경우 정부개입을 줄여나가면서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

- 정부위원회제도는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그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위원회는 공청회로 대체
  - 이해당사자가 정책조정과정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재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공익제소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인프라 구축
- 갈등조정 과정의 중재자로서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범국민적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함
-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치의 고수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
  - 정부가 법에 의한 갈등조정을 고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갈등조정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
    - 특히 중재를 담당한 기관은 조정결과보다는 조정원칙의 준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그 성과를 평가받아야 함
- 자율적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하여 그에 적합한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야 함
- 갈등조정 실패시 책임을 정부에게 추궁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정부 개입을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시급
  - 비공식중재자로서 언론과 전문가집단의 책임있는 여론형성이 필요
    - 명분보다는 실질적 자세로 이해갈등문제를 접근하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자제하고, 언론과 전문가집단 내부의 공론 도출 및 자체규율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임

##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



## V.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규제방식을 각 사안별로 분리하여 개별적 규제로 전환하고 경쟁정책 시행 강화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이에 근거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등을 완화하되,
  - 상호출자금지는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효율성 증대가 없는 기업결합은 규제 강화
  - 독점력 확장 및 남용에 대한 구조적 교정책으로서 기업분할과 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
- 私的 訴訟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
  -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조항 폐지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私的 訴訟 수행의 인센티브 제고
  - 기업결합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직접 해당 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및 부분 민유화 병행 전략' 추진
  - 실질적인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상승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의지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

□ 금융기관은 성과중심 경영체제 정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성과보상체계의 확충을 통해 혁신지향적 임직원을 확보하고 위험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를 구축

□ 노사정위원회 기능 전환: 노사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의 문제 등 노사간 이해관계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대한 노사합의의 기대는 어려우므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시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으로 전환
  - 노사정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전도 전국차원의 노사관계에 영향이 있는 핵심사안 위주로 취급
  -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각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노사문제를 정치적 해결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구도를 확립할 필요.

□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 중기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
- 기금까지 포함하는 통합재정 중심의 예산편성 및 심의관행 정착
- IMF의 새로운 재정통계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

□ 독립적 규제기구 또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확립을 전제로 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요금규제 방식 등 각종 정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

##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 지역대학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산학협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

### 산업·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을 분권화

-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차등화

### 국가R&D사업, 산학연 협동사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역할 대폭 강화

- 현재 정부, 대학 및 출연연구소 중심의 과제 선정·기획 방식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체제로 전환
- 산학연 협동의 과제심의에 있어 수행 기업을 우선 평가하고, 선정된 기업이 공동연구 대학·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방 수준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확대

- 재정·금융지원, 병역특례요원의 배치 등에 관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해소
- 진입제한적 규제를 해지하고 특히 외국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여, 개인사업자, 영세업체의 전문화·대기업화 유도

### IT의 수요·활용기반 강화로 IT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상의 개인보호, 보안 등에 관한 규제 환경 조속히 정비하여 IT활용에 대한 기업·소비자의 신뢰 확보
-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을 조기에 정착

-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
  - 초중등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학교선택권을 사립고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 교육훈련기관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금지 위주의 현행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 지역 교육(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
  - 지역교육당국과 지자체와의 연계강화를 전제로,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개혁 추진
- IT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교육의 정착 지원
  - 사이버 교육의 운영모델 및 콘텐츠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별개의 관점에서 시행
  - 수도권의 억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win-win 전략을 채택
  - 수도권 입지규제 대신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은 이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유치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인프라조성 등 유인책을 강화
- 지역에 밀착된 인적자원의 양성체계를 구축
  - 현재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지역발전중심센터로 특

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공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 운영

- 청단위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대전지역에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추가이전을 검토하여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으로 운영

교통부문간 투자배분 비율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제시

- 중장기적으로 도로투자는 현재의 총교통투자 대비 60% 수준에서 5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철도와 항만투자는 각각 현재보다 2%~3% 포인트 이상 상향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

- 현재의 초과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통행요금, 시설이용요금 등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의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

- 非중동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전력가격체계 정비

- 직접가격규제를 지양하고 소득정책과 공공서비스 보조수단으로 동원되는 전력가격체계를 정비하여 소비자간 교차부담의 과대한 차이를 축소

## <경제발전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편
  -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급대상폭을 확대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자원 관리체제로의 전환
  - 환경자원 사용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자발적인 자원사용 절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
  - 환경통계 확충, 원격측정장치 구축 등 환경분야 정보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오염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상근거를 정비하는 등 환경정책 선진화에 주력
-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정책전환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확대로 보완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지원, 탄력적근무제 확산 등 수요와 공급측면의 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 추진
  - 또한 적극적 전방위 개방 추진으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 투자환경 개선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일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구축 필요
    - 한반도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 수행
    - 이를 위한 동북아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상호이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투자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